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9면	['이제는 강원원팀' 릴레이 특별기고] ④ 이제 강원의 희망...	1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의장단 2018평창기념재단 방문	2
江原日報	03면	“평창정신 전세계에 전해달라” 도의회, 2018기념재단 방문	2
연립뉴스		강원도의회, 현장 의정활동 재개...2018평창기념재단 등 방...	3
에너지경제	온라인	강원도의회 의장단,평창기념재단 등 3개 기관 방문	4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원 48명 중 9명 주식 억대 보유	5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하반기 의장은 누구? 물밑작업 치열	6
강원도민일보	04면	원주 기업도시 'THE자람 놀봄센터' 1호점 개소	7
江原日報	21면	‘지역 우수 대학 연계’ 돌봄대기 수요 해소 전폭 지원	8
江原日報	21면	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이·취임식	8
강원도민일보	13면	평창 농기계임대사업소 미탄지소 개소	9
江原日報		[포토뉴스]제15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생활체육 풋살대...	9
강원도민일보	07면	도내 12곳 '두 번째 집' 취득해도 혜택... 기대 반 우려 반	10
강원도민일보	12면	홍천 5673억원 규모 관광단지 투자협약	10
江原日報	01면	교육 때문에 ... 작년 6,340명 강원 떠났다	11
江原日報	02면	강개공 특정 업체에 14억 특혜 의혹	11
강원도민일보	11면	삼척 준경묘·영경묘 봉심재연 20일 열린다	12
강원도민일보	13면	"주민 건강위협 신평창변전소 건립 철회하라"	12
江原日報	11면	부론산단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 도약	13
江原日報	21면	인제·횡성·양구 지역청년 창업 지원 나선다	13
강원도민일보	14면	철원군 버 직파재배로 일손 줄인다	14
강원도민일보	15면	양양 지경관광지 개발 10여년만에 착공	14
江原日報	04면	4월에 감자 파종은 처음... 올 농사 심상찮다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방시대 엑스포 파급력 남달라야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바이오헬스·교통망' 강원 힘 모아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조직개편, ‘도정 목표’ 달성에 방점을 뒀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유가·원료 값 오름세, 물가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	19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오피니언 19면

이제 강원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때

'이제는 강원원팀' 릴레이 특별기고 ④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22대 국회 입성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드디어 끝났다. 당선인들에게는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리며, 아쉽게도 낙선된 후보자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선인들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들을 다 시금 가슴 깊이 새겨 나갔으면 한다. 그것이 도민들 각자가 신념에 따라 소신껏 선택한 결과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인이 그렇겠지만, 국회는 입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도민의 선택을 받은 강원의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진 정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의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법 발굴, 지역소멸 대응,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등 만만치 않은 지역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발전을 위

한 개방적 자세와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한 가지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정치 불모지이자 소수자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겐 통합과 타협이 필수적이다. 더는 지나친 정쟁과 대립은 피하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이를 수렴하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통합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를 벗어나 도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오로지 강원을 위해 뭉쳐야 한다.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소통과 화합만이 우리 지역의 부족한 정치력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정치인들이 본인이 약속한 공약은 잘 지켜 나가는지, 지역과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청렴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당선인들이 본연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껏 겪어왔던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할 수 있지 않을까?

수주대토(守株待兔)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

를 기다린다는 말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며, 발전을 모른다는 뜻이다. 눈앞의 이익만 쫓고, 요행으로 일의 성취를 바라며, 다음 선거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도민의 시름은 깊어질만 같 것이다. 기다려서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조금만 늦어도 강원의 희망찬 미래는 기약하기 힘들다는 각오로, 지금 당장 강원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에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지역이다. 기필코 소통을 통한 통합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며, 강원 전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150만 도민 모두와 공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소통이야말로 과거부터 소외받아온 강원예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당선자 간 선입견 없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완성될 것이다.

도민들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길 기대하며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만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아무쪼록, 강원의 부름을 받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인물 22면



도의회 의장단 2018평창기념재단 방문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최종수·지광천 도의원, 김종욱 사무처장이 15일 2018평창기념재단에 방문해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종합 03면

“평창정신 전세계에 전해달라”

도의회, 2018기념재단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2018 평창기념재단을 찾아 평창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열 도의장,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등은 이날 2018평창동계 올림픽 유산과 가치를 보존하고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설립된 2018평창기념재단을 찾아 운영 현황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혁열 의장은 “2018평창기념재단은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와 평화와 화합이라는 ‘평창 가치’ 확산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창이 전 세계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도의회는 도교육청 산하 기관인 원주교육문화관, 교육과학정보원을 방문, 기관별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현정기자



2024년 04월 15일 (월)

종합

강원도의회, 현장 의정활동 재개...2018평창기념재단 등 방문



2018평창기념재단 찾은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2018평창기념재단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교육문화관, 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등 3곳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열 의장은 "2018평창기념재단은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평화와 화합이라는 가치 확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평창이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장단은 원주교육문화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더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만큼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교육과학정보원에서는 미래 교육을 디자인하는 창의 융합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4일 강원문화재단.강원관광재단.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9개 산하기관을 찾아 기관별로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conanys@yna.co.kr

2024년 04월 16일 (화)

종합

에너지경제

강원도의회 의장단, 평창기념재단 등 3개 기관 방문



▲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5일 2018평창기념재단을 방문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강원도의회 의장단은 15일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등 3개 기관을 방문했다.

의장단은 3개 기관을 방문해 해당기관의 운영현황과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열 의장은 “2018평창기념재단은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평화와 화합이라는 '평창 가치' 확산에 든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창'이 대한민국 을 넘어 전세계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주교육문화관 은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만큼 시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교육과학정보원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직무연수 시릿,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나이스(NEIS)를 포함한 교정보서서비스 지원 등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미래교육을 디자인하는 창의융합교육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ess003@ekn.kr)

누리일보, 엔사이드 등 54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종합 03면

도의원 48명 중 9명 주식 역대 보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5명이 주식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본지가 지난달 말 공개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재산신고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의원 48명 가운데 15명이 3000만원 이상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명 가운데선 문관현(태백) 의원 25억7300만원, 하석균(원주) 의원 7억8000만원, 최승순(강릉) 의원 4억4300만원, 임미선(비례) 의원 4억1700만원, 심영근(삼척) 3억7000만원, 이승진(비례) 의원 2억6200만원, 최재석(동해) 의원 1억5800만원, 김정수(철원) 의원 1억5000만원, 김기홍(원주) 의원 1억1200만원 등 9명이 역대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위는 해당 주식의 보유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주식을 팔거나 은행 등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종합 03면

도의회 하반기 의장은 누구? 물밑작업 치열

다수당 국민의힘 의원들간 경쟁 본격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체 49개 의석 중 과반이 넘는 41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의 경우 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반기 의장으로는 권혁열(강릉) 현 의장을 비롯해 김기홍(원주)·한창수(횡성) 부의장, 김기철(정선) 경제산업위원장, 박길선(원주) 교육위원장, 4선의 김시성(속초) 전 의장 등 재

선급 이상 의원들이 물망에 오른다.

심영곤(삼척) 운영위원장,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 박기영(춘천) 안전건설위원장 등은 부의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 방식 등을 논의, 6월 후보를 가려낼 전망이다. 다수가 도전장을 내면서 표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후보군들은 동료 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셈법이 분주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장단에

포함될 한 석이 아쉬운 처지다. 민주당은 현재 도의회에 6석을 보유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1석을 배정받았던 전반기보다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한 도의원은 “물밑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될지 눈치 싸움이 분주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16일 시작하는 회기 중 의원들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종합 04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원주 기업도시 센텀뷰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박정하 의원,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도의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연계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원주 기업도시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

6개 돌봄전용교실·학생 120명 수용

지역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THE자람 늘봄센터'가 1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15일 도교육청은 원주 기업도시 센텀뷰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박정하 국회의원,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도의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연계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기업도시 내 샘마루초와 섬강초의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초교의 돌봄 대기 수요자(127명)는 원주지역 전체 수요의 26.8%에 달한다. 늘봄센터 1호점은 경

동대에 위탁해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돌봄교실의 질 제고와 다양한 돌봄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6개 돌봄전용교실로 구성, 실당 20명씩 총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센터장 1명과 돌봄전담사 6명이 배치돼 학생들을 관리한다. 독서논술, 금융경제교육, 원주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학기 중에는 정규수업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연다.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돌봄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민영

‘지역 우수 대학 연계’ 돌봄대기 수요 해소 전폭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경동대가 함께하는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이 15일 원주기업도시 센텀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박정하 국회의원,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김희철 교육위원, 주영일 원주교육장, 권오만 경동대 산학협력단장, 이은정 더자람 늘봄센터장을 비롯한 삼강초교 및 샘마루초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도교육청과 경동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기업도시 내 샘마루초교와 삼강초교의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운영을 시작했다. 6개의 돌봄 교실로 구성돼 교실당 20명씩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업도시 내 127명의 돌봄 대기 수요 대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경동대 원주기업도시 내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15일 원주기업도시 센텀뷰에서 ‘대학 연계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이 열려 신경호 교육감과 박정하 국회의원,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권오만 경동대 산학협력단장, 김대훈 경동대 교수, 이은정 더자람 늘봄센터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원주 기업도시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THE자람 늘봄센터가 우수사례가 돼

춘천·강릉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예산 심사 시 돌봄 수요 분야에 대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늘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지역 우수 대학과 연계한 센터 개점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프로그램은 독서논술, 전래놀이, 음악놀이 등 ‘특기 적성 프로그램’, 금융경제 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보건교육, 팔라테스 등 ‘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돌봄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과 돌봄전담사 6명을 배치했으며 경동대 교육·사회복지 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을 채용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동휘기자



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이·취임식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이·취임식이 15일 태백호텔 한국관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이한영·문관현 도의원과 협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지역 13면



평창 농기계임대사업소 미탄지소 개소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미탄지소가 15일 미탄면 서동로 현지에서 심재국 군수, 김성기 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 김태운 농협군지부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15일 (월)

사회

[포토뉴스] 제15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생활체육 풋살대회



'제15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생활체육 풋살대회'가 13일 홍천 영귀미면 체육공원에서 신경호 도교육감, 김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상기 도의원, 신은집 홍천군 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경제 07면

도내 12곳 '두 번째 집' 취득해도 혜택... 기대 반 우려 반

인구감소지 4억원↓ 주택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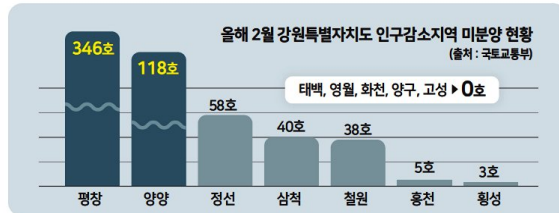
'1세대 1주택' 자격 인정 추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절감

오션뷰 등 일부만 인기 가능성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강원지역 12개 시·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더라도 '1세대 1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모든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도 크지만 오션뷰 등 이점이 있는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



트'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대상지역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방문인구와 외국인 인력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도내 대상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

세컨드홈은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월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을 30년 보유 한 뒤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

과액에서 최대 8700만원 상당의 세부담을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은 올 하반기 관련 세법을 개정,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강원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중 실거래가 4억원을 넘는 아파트 거래는 평창 A아파트(5억1000만원), B아파트(4억4000만원), C아파트(4억2000만원), 고성 D아파트(4억5000만원) 등 총 4건이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기에 사실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모든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강원지역 내에 적체된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에 미분양 주택은 총 608호에 달한다. 특히 평창과 양양은 각각

346호, 118호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지적되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A지회장은 "실제로 세컨드홈으로 살 수는 있지만 투자 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우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고성, 양양 등 오션뷰가 있는 지역은 인기를 끌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의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횡성과 고성에 총 210명이 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오는 2026년 지역인구증가율과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에 따라 재지정될 예정이다.

박창현·정우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지역 12면

홍천 5673억원 규모 관광단지 투자협약

강원도-군-세안레저산업

샤인데일 관광단지 조성

숙박시설 루지테마파크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이 세안레저산업(주)과 손잡고, 홍천군 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강원도는 15일 오후 도청에서 홍천군, 세안레저산업(주)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홍천 샤인데일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세안레저산업은 기존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샤인데일 골프장에 숙박과 문화체육 시설을 추가 설치해 골프장 일대를 관광단지로 확대 조성한다. 관광단



홍천 샤인데일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식이 15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한상 세안레저산업(주)대표, 신영재 홍천군수, 도, 홍천군, 도의회, 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지 전체 면적은 242만 ㎡이며 총 5673억원을 투자한다. 총 274실 규모 숙박시설과 루지테마파크, 골프장(36홀), 로컬마켓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강원도는 샤인데일 관광단지 조성으로 약 250여명의 신규고용 효과와 1조 797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태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첫 번째 관광단지 투자협약"이라며 "경기가 어려운데 대규모 투자를 결단해줘 감사하다. 여러분의 성공은 일자리 창출부터 세수 확보까지 이어지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샤인데일 관광단지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관광레저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안레저산업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천군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한상 세안레저산업대표이사는 "지역사회 뜻에 부합하고 지역을 빛낼 수 있는 관광시설을 적극 만들겠다"고 했다. 김덕형·유승현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종합 01면

교육 때문에 ... 작년 6,340명 강원 떠났다

10명 중 6명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이주
전출 요인 7개 사유 중 최근 3년 연속 상승 유일
고교 진학 과정서 유출 사례도 다수 ... 대책 시급

춘천에서 고교를 졸업한 이모(19)씨는 철도공무원이 되기 위해 경기도 모 대학에 입학했다. 원하는 꿈을 이룬 이씨는 “집과 가까운 곳으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지방에 특성화된 학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민 6,300여명이 진학과 학업, 자녀 교육 등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3년 연속 전

출 인구가 늘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을 사유로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6,340명에 달한다. 교육을 이유로 떠난 전출자는 2019년 5,291명에서 2020년 5,290명, 2021년 5,450명, 2022년 6,039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직업’ ‘가족’ ‘주택’ 등 통계청이 집계하는 7가지 전출 사유 중 3년 연속 으뜸세를 보인 항목은 ‘교육’이 유

연도	전출자(명)	증감(명)
2020년	5,290	-
2021년	5,450	↑ 160
2022년	6,039	↑ 589
2023년	6,340	↑ 301

일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을 이유로 떠난 도민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향한 인구는 4,05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때문에 강원도를 떠난 10명 중 6명이 수도권으로 향한 셈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비싼 집값과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지만,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교육 열기 등으로 인해 인구

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교육을 이유로 지난해 전국에서 역대 최고인 9만1,662명이 서울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는 사례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위해 우수한 재주마져 타 시·도로 떠나는 등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종합 02면

강개공 특정 업체에 14억 특혜 의혹

정부 공기업 사업 실태점검

강원개발공사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통해 14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에서 적발됐다.

최근 전국 5개 지방 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부패예방추진단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는 사업자 선정

지방도 재구조화사업 공모서 법령 위반·과도한 가점 등 적발
강원 비롯 전국 5개 공사 80건 위법 사례 77억 환수·감액 조치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국조실은 도내 모 자치단체가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가의 개질아스콘을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하고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면서 별도 심의 절차 없이 공급사를 A업체로 설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개발공사는 이후 공급사 재선정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A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강원개발공사를 비롯,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공사에서 모두 8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77억원의 환수 및 감액 조치가 진행된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53건)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금액 환수와 예산 감액, 위법 사례에 대한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이무현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지역 11면

삼척 준경묘·영경묘 봉심재연 20일 열린다

본지·시 주최, 청명제 체험도
미로면 준경묘역·재실광장 일원
금천교~홍살문 200m 행차

조선왕조태종의발상지로국가사적 제524호로지정된삼척준경묘·영경묘의강원도관찰사봉심재연및청명제문화체험행사가오는20일 오전10시미로면준경묘역및재실광장일원에서열린다.

봉심의식은삼척시와강원도민일

보가주최하고준경묘영경묘봉향회와전주이씨삼척시분원,한민족문화대로,청명봉사회등이협력해조선태종의뿌리역사의의미를되새긴다.이날강원도관찰사준경묘봉심재연은대한제국기강원도관찰사가행했던준경묘·영경묘봉심의식을재연하는것으로,관찰사행렬이준경묘역입구금천교에서홍살문까지200m구간을행차한뒤능상과비각,제각을차례로살피는봉심의식등이펼쳐진다.또제사에쓸제기의이상유무와수량을파악하는데이어

제각과비각주변을청소하는등모습이재연된다.

이어준경묘재실앞광장에서미로면활기리치유의숲을테마로한우드버닝과전통발효차체험행사를비롯해준경묘역과봉심재연을관람한이후가족사진또는행사사진을찍어공유한참관객들에게미로면특산물을선물하는이벤트가마련된다.또준경묘·영경묘청명제제수로올리는두부와삼척농산물로만든전통주·전통차시식및시음,전통조포체험,전통강정및잡쌀떡만들기

등가족프로그램이진행된다.준경묘는조선태조이성계의5대조인이양무장군의묘이고영경묘는그의부인이씨의묘로,태조는조선을개국하고왕위에오르자준경묘·영경묘가있는삼척을현에서부로승격시키고홍서대를하사했다.

청명제는고종황제가1899년준경·영경묘를새롭게수축한후제향은나라에서직접거행하라는조치를내림에따라그전형(典型)이오늘날까지120여년동안전승되고있는유서깊은역사문화행사이다. 구정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지역 13면

“주민 건강위협 신평창변전소 건립 철회하라”

이슈현장

대화리 602번지 일대 설치 예정
군청서 주민·번영회 반대집회
자연훼손·전자파 등 불편 주장

속보=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60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한전의 신평창변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대화면변전소 반대위원회 주민들은 15일 평창군청 앞 공터에서 변전소 설치 반대 집회(본보 3월 25일자 15면)를 열어 변전소 설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대화면 하안미 1리, 대화8리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1리, 대화8리 주민들이 15일 군청 앞 공터에서 한전의 신평창변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변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대화면번영회(회장 김상수) 등 100여명은 ‘청정지대 변전소 설치 전면백지화하라’, ‘마을주민 다 죽이는 변전소 결사반대’ 현수막과 ‘건강하게 살고 싶다’ 등의 피켓을 들고 변전소 설치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마을에 변전소가 들어

서면 청정 자연지역 경관훼손과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악화는 물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평창군도 변전소 설치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교영 변전소반대위원장은 “청정지역 마을에 변전소가 건설되

면 자연경관훼손, 전자파와 공해 등으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변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안미 1리 주민들은 변전소반대위원회를 구성, 마을 주변과 국도 31호선변에 변전소 건설 반대 현수막 여러 점을 걸고 지난달 23일 마을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변전소 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신평창변전소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602번지 일대 16만 5000여㎡에 건설할 예정으로 한전 측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상태로 오는 2028년까지 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지역 11면

부론산단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 도약

【원주】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국비가 확보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가 원주 부론산단에 들어가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확정됐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사업 시행을 맡게 될 기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원주시 실증센터 조성 사업제안서 정부 제출 예정
교육센터 건립도 활기... 연내 착공 목표 실시설계 한창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국비 145억원 등 총 422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는 국비 145억원을 포함한 334억원이 소요된다.

강원자치도와 시는 강원테크노파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과 협업체 관련 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며, 부론산단을 최적의 입지로

포함한 제안서를 마련했다.

오는 22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수십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착공한 부론산단에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마련되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도체 교육센터 조성도 활

기를 띠고 있다.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한창이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에는 강원자치도와 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텔코리아 등이 협업하는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원강수 시장은 “매년 1,000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새로운 산업단지와 용수·전력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강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인물 21면

인제·횡성·양구 지역청년 창업 지원 나선다

인제군 등 한강 수계유역 5개 시·군이 K-water·서울시와 지역 청년 지원사업을 펼친다.

‘2024년 넥스트 로컬 6기 업무 협약식’이 15일 K-water 한강유역본부에서 열려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제군, 횡성군, 양구군 등 도내 지역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상생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청년들의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 참여하는 한강 수계유역 4개 지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한강 수계유역 5개 시·군 K-water·서울시와 협약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식’이 15일 K-water 회의실에서 최상기 인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 오승환 K-water 한강유역본부장, 김문근 단양군수, 김형진 횡성부군수, 채홍경 제천부시장, 정용수 K-water 한강경영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는 참가팀을 모집해 이달부터 사전교육에 들어가며 사업 대상에 선정된 팀은 올 6월부터 2개월간 각 지역에서 체류하

며 1단계 자원조사 활동을 위한 실비(1인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1단계 심사를 거쳐 2단계 사업화과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초

기 창업자금(최대 2,000만원)과 6개월간 창업교육 및 전담코칭, 사업모델 시범운영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사업화과정 진행 경과 심사에서 최종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최종 창업자금(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 인구의 지역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청년 창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ater 한강유역본부 오승환 본부장은 “이번 ‘넥스트로컬’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과 더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지역 14면

철원군 벼 직파재배로 일손 줄인다

10ha 마른논 직파 시범 추진

레이저 균형기 활용 평탄화

잡초 방제 등 단점 보완 기대



철원군은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 10ha의 논에서 벼 직파재배를 추진한다.

벼 직파재배는 빠르게 고령화돼가는 수도작 농업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벼농사 기술이지만 잡초의 발생량이 많고 조류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철원군은 벼 직파재배에 필요한 논 평탄화 작업을 레이저 균형기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직파재배 기술을

개발해왔고 올해에는 마른논 직파와 무논에서의 직파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레이저 균형기를 활용한 논 평탄화(균평) 작업으로 물관리가 용이하고 잡초방제 및 거름의 효율 증진에도 유리해 향후 철원군의 벼농사 노동력 절감에 매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논 평탄화 작업은 벼 직파재배에 꼭 필요하며 벼 이앙재배 및 콩재배 등 논지의 모든 식량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또한군은 '벼 직

파재배 시범사업'과 더불어 농업용 드론 및 승용방제기,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 등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희종 군 농업기술과장은 "벼 직파재배는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 때 모판의 이동 등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을 줄여줄 수 있다"며 "고품질 쌀 생산뿐만 아니라 콩이나 옥수수 등 안정적인 작물재배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지역 15면

양양 지경관광지 개발 10여년만에 착공

최근 건축 허가 완료 내달 공사

시행사 저층 클럽하우스 선공사

남부권 새 관광 중심지 기대



양양군 현남면 지경관광지 조감도.

양양군의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 가운데 추진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남면 지경관광지 개발사업이 10여년만에 본격화된다.

군은 지난달 말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달 토목공사에 이어 6월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한 대기업이 쇼핑몰이 포함된

대규모 리조트 조성을 포함하고 있는 현남면 지경관광지 개발사업은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2012년 시작된 지경관광

지 개발사업은 2014년 관광지 지정 계획 고시에 이어 2021년 기공식까지 개최했으나 실제 착공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 더욱이 공사가 장기간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주의 의지를 지

적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돼왔으나 이번에 건축인허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와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FS퀘어씨사이드 측은 우선저층의 클럽하우스 공사에 착수한 후 10월쯤에 20층 규모의 숙박·판매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이후 추가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동은 군 관광개발팀장은 "현재 바닷가 쪽으로 배치된 아웃렛 시설의 경우 기후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동선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클럽하우스를 시작으로 본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최훈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사회 04면

4월에 감자 파종은 처음... 올 농사 심상찮다

이상기후 봄철에 농민 시름

기후위기와 변덕스러운 봄날씨로 일조량이 줄어들며 강원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파종 이후 충분한 일조량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15일에도 비가 내리는 등 곳곳은 날씨로 흉작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상고온과 잦은 비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올해도 또다시 흉작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년째 흥전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이모(69)씨는 처음으로 '4월 파종'을 했다. 그동안 해마다 3월 안에 파종을 했지만 올해는 3월에도 곳곳은 날씨와 일조량 감소로 파종 시기를 놓친 탓이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고온 현상과 비가 반복되면서 감자가 썩고 작황이 매우 나빴다"며 "올해도 비가 자주 오는 데다 일조량이 나빠 또다시 감자농사를 망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과수농민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동지방의 경우 4월 중순이면 사과에 꽃눈이 있어야 하는데도 상당수의 나무에 꽃눈이 없지 않는 등 이상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에서 사과 농사를 하는 최모

1~3월 일조시간 평년 대비 87시간 적어, 곳곳은 날씨에 흉작 우려
영동지역 사과나무 상당수도 꽃눈 없지 않는 등 이상현상 이어져

(61)씨는 "지난해에 비해 꽃눈이 적은 나무가 20% 줄었다"며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는 전부 다 꽃눈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조량이 나빠 상황

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일조시간이 평년대비 87시간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또,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도내 일조시간은 49.4시간으로, 평년 대비 0.6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 임상현 원장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사설/칼럼 19면

지방시대 엑스포 파급력 남달라야

- '분권 촉진 춘천선언' 22주년 기념비적 장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주최하는 균형발전 메가이벤트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0~11월 중춘천에서 개최됩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17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자치 현주소와 미래를 조망하면서 다양한 주체와 교류소통하는 장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일군 여러 업적과 미래전망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전시하고 체험, 교류, 모색하는 최대 축제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엑스포의 기원은 2004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입니다.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이 희망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부산에서 처음 열려 지역 혁신 성공 사례를 발굴, 확산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후 역대 정부에서 지역투자박람회, 지역발전주간, 지역희망박람회,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시대엑스포로 이어지며 이름이 바뀌긴 했으나 목적은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해왔습니다. 실상 20주년 기념비적인 장으로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번 춘천에서의 엑스포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춘천은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정책

을 촉구하는 춘천선언을 선포한 역사성을 자랑합니다. 그해 9월 19일 전국 지방분권운동 추진 시민단체 대표 50여명이 춘천에 모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춘천선언'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게 하는 동시에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자치 3법이 만들어지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를 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춘천에서의 지방시대 엑스포는 단지 공공이벤트에 머무는 행사성으로 치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 엑스포를 개최한 지역의 4만~5만명 방문에 따른 생산 및 소득 유발과 같은 경제적 파급 이상의 기대효과를 내야 합니다. 인구 급감과 경제력 쇠퇴로 내리막길을 걷는 지역에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방향성을 드러내는 장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지방의 공동화,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 구조, 청년층 대거 이탈 현상 등 부조리를 타파하는 강도 높은 정책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통렬한 심정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향한 열망을 치열하게 담아내야 일회성 이벤트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4월 16일 (화)

사설/칼럼 19면

‘바이오헬스·교통망’ 강원 힘 모아야

-시장·군수 설문...반도체, 실현 가능성이 관건

도내 시장·군수들은 강원도가 주력해야 할 첨단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는 도가 반도체 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됩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시급하게 해결할 강원 현안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선택했습니다. 도로·철도망 확충은 강원도의 미래 산업을 이끌 기반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오산업과 교통망 확충을 최대 과제로 설정한 만큼, 도와 지자체, 도 정치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견해는, 22대 국회의원선거당선인 화합 교례회에서 본지가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표출됐습니다. 특히 15명의 자치단체장 중 9명이 도의 첨단산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택한 데 반해, 반도체는 3표를 얻어 사실상 뒷순위로 밀렸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시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지만, 용수와 전력 등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군수들이 반도체 대신 강원 대표 첨단산업으로 내세운 바이오헬스 분야는,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여부가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도는 춘천과 홍천을 중심으로 자생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토대로 정부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했으며, 바이오 빅4 기업을 보유한 인천시와 국책기관·연구인프라를 갖춘 충북 오송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치밀한 계획과 지역 정치 역량이 요구됩니다.

강원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강조됐습니다. 그중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용문~홍천·여주~원주 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고성~제진 동해 북부선의 중요성도 재확인됐습니다.

이번 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강원도와 시군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철도·도로망 확충이 우선 과제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행정력을 모으는 한편, 기존에 진행 중인 교통망을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여야를 초월해 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힘을 쏟아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사설/칼럼 19면

道 조직개편, '도정 목표' 달성에 방점을 뒀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이번 개편은 공직 내부 인원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강원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효율성에 방점을 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돼야 함은 물론이다. 유사·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당연히 통폐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조직개편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밀어붙이기식 개편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른다.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해도 그대로 개편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개편안이 수립된 이후에도 검토와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영향에 의해 그 내용이 변화되고, 결국 개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즉, 공무원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상·하향적 의견'을 적절하게 결합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강원자치도 내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해야 하며, 조직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번 강원자치도의 조직개편에서 주목되는 점은 올 7월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임기 반환점에 돌입하며 '정책실' 신설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력이 높은 도지사 직속의 정책실과 비서실 투톱 체제를 가동해 김진태 표(標)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

이된다. 정책실은 김진태 도정의 주요 현안·공약사업 추진 상황 점검, 국회·정부부처와의 정무적 협의, 실·국 간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자치도의 조직개편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그동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관련된 몇몇 집단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 대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가 이뤄졌고 비합리성이 증대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준국

장급 조직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관, SOC정책관, 지역소멸대응추진단, 도청이전추진단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진단을 해야 한다.

SOC 확충, 도청 신축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지역소멸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리고 개편한 조직은 또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 최소한 임기가 끝난 이후 다음 지사가 취임하더라도 도정을 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개편된 조직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은 가(假)건물이 아니다. 조직이 경직돼 시대변화에 뒤처지면 안 되겠지만 도정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뺏다 붙였다 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변경이 아니라 그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이다.

김진태 도정 7월 반환점 돌입, 정책실 신설

유사·중복되거나 기능 쇠퇴한 조직은 통폐합

전문성 요구되는 분야는 기능 더욱 강화할 때

江原日報

2024년 04월 16일 (화)

사설/칼럼 19면

유가·원료 값 오름세, 물가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 상승 속 전기·가스요금 인상설과 함께 코코아, 설탕 등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지난 7~11일)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당 1,673.25원으로 1주일 전보다 26.29원 인상됐다.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11.1원 뚝 ℔당 1,551.30원으로 조사됐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3주 연속 상승세다. 여기에 더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 기준 11일(현지시간) 코코아 선물 가격은 톤당 1만373달러(약 1,430만원)로 1주일 만에 9.6% 올랐다. 한 달 전에 비해 54.18%, 올해 초와 비교하면 142.6% 폭등한 것이다. 코코아 가격이 이처럼 치솟은 것은 지난해 가뭄 등 기후 재해와 병충해 확산으로 주산지인 서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설탕 가격도 강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3년 설탕 가격지수가 평균 145.0으로 전년(114.5) 대비 26.6% 올랐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원료 값도 상승하고 있어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품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물가를 잡아야 할 판에 엮힌 데 덮친 격이다. 전망도 불투명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 불안은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기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도 임박했다. 전기·가스료 등 공공부문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 연료 가격, 경기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고물가 외에 고유가·고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 문제까지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 서민 경제가 깊은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지고 일상의 부담과 어려움은 커진다. 경제에도 부정적이다. 소비 심리 위축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고물가는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전환에도 걸림돌이다. 외부적 변수는 어쩔 수 없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야 수출 호조로 살아난 온기로 서민 고통을 줄이고 소비 심리와 경기 회복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 서민 경제가 더는 파헤쳐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는 물가 관리에 모두 집중하기 바란다.